

투데이 칼럼

가짜평균의 함정: 숫자 뒤에 숨은 불평등의 민낯

통계는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나 그 거울은 늘 정직하지 않다. 특히 국민의 소득과 자산을 측정할 때, 우리가 흔히 접하는 '평균'이라는 숫자는 현실을 오도하기 쉽다. 한국 사회에서 상위 10%가 소득과 자산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은 평균치를 끌어올려, 중하위 계층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괴리된 이른바 '가짜평균'을 형성한다. 이 착시 효과는 정책 수립과 사회 인식에 왜곡을 불러오며, 불평등을 가리는 가림막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우선 소득 분포를 보자. 통계청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다. 자산의 경우는 그 격차가 더 심하다.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평균을 내면 숫자는 자연스럽게 상위 계층의 뒤편에 의해 끌어올려진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생활 수준은 이 평균과는 거리가 멀다. 평균 소득이 예컨대 400만원이라고 발표되었을 때, 상당수 국민은 "나는 그 절반도 못 버는데 왜 평균은 이렇게 높은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바로 이것이 가짜평균의 정체다. 평균이 현실을 왜곡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평균은 단순히 모든 값을



오 상 군
본보 경제부장

더해 인원수로 나눈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값이 극단적으로 높은 일부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다. 반대로 중앙값은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값으로, 다수 국민의 생활수준을 더 잘 반영한다. 실제로 한국의 가계소득 중앙값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며, 이는 국민 다수가 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정부나 언론이 평균치를 더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균'이라는 숫자가 주는 인상은 마치 국민 전체가 일정 수준의 부를 공유하고 있는 듯한 착시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짜평균의 효과는 정책 논의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이나 최저임금 조정 논의에서 평균 소득이 준거점으로 사용될 경우, 정책의 수혜 대상은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집단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 평균 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정부

는 이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보다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정책 설계 자체가 비현실적인 출발선 위에서 진행되는 셈이다. 이는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넓히고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킨다. 또한 가짜평균은 사회 인식을 왜곡한다. 국민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기준은 통계와 사회 담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평균 소득이 높다고 들으면, 개인은 자신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끼고, 이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생활수준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국가 전체 소득이 올랐다'는 보도가 찾아지면 국민은 체감과 달리 자신이 더 뒤처졌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가짜평균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은 개인의 삶에 불필요한 불안과 위축을 안겨준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통계의 활용 방식에서 중앙값과 분포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 평균만으로 국민의 삶을 설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격차, 소득 5분위 간의 상대적 비율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가 더 자주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언론 역시 평균치 보도에 신중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통계가 불일치할 때 불신이 쌓이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해석하는 것은 언론의 본분이다. 나아가 정책 입안자들은 '가짜평균'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의 생활 실태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기본적 삶의 조건은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 이하 계층의 상황에 맞추어 지원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복지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우리는 숫자에 속지 말아야 한다. 평균이라는 한 줄기 수치가 보여주는 세계는 때로 현실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린다. 가짜평균은 불평등을 가리고, 체감 빈곤을 확대하며,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킨다. 이제는 평균의 미술에 기대기보다 분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이 이아말로 통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길이자, 불평등 사회를 치유하는 첫걸음이다.

사설

전주어의당한방병원 양·한방 업무협약 체결

의료법인 지리산의료재단 전주어의당 한방병원이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과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해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통합 면역암 치료 연계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사업 홍보증진 △양·한방 연계를 통한 맞춤형 치료 제공 △소속 임직원 및 가족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지원 △임직원에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이다. 지역사회 의료 발전을 위한 두 기관의 상호 협약은 매우 의미가 있다. 두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 발전에 힘쓰고 진료 협진을 통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의의당 한방병원 김권효 이사장은 "어의당한방병원은 통합 면역암 치료 병원으로 이번 협

약을 계기로 양의학, 한의학 협진을 통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역사회 보건 향상을 위한 상호 발전 모색에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22에 위치한 전주어의당한방병원은 지난 2024년에도 병원을 침대 대한베드 모션큐를 추가 설치했다. 전주어의당 한방병원은 특히 암환자의 치료를 도와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면역강화 요법을 하고 있다. 수술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비수술적 적주관절 요법도 실시한다. 수술 후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센터를 경영 이념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 공헌에도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북대학교에 1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난임 극복과 식생활 혁명

정운천 전 국회의원이 최근 책을 출간했다. 이름은 '출산의 기적 - 흙이 생명이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난임 극복과 식생활 혁명을 제시했다. 현대사회에서 난임은 많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민족의 미래에 관계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고 약 20-30%의 부부가 난임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학기술이나 의학의 발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이다. 식습관과 생활방식이 생식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러한 기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 음식은 생명력과 영양분, 섬유질을 근본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다. 전일업을 기초로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 등 생명력이 강하고 영양과 섬유질이 풍부한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보약이다. 그런데 조상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체내에 들어오면서 몸속에 독성이 축적되어 면역성이 약한 생식기능이 영향을 받아 불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상적인 남성의 경우 정자수는 1ml당 1억 개 이상인데 현대 남성의 정자수가 4000만 마리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 임신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현대여성의 경우에도 난자 노화 현상이 일어나 20-30대 여성들의 난자 나이가 생물학적으로 40-50대 여성의 난자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졌다. 정 전 의원은 '출산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심각성을 가지고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아마존, AI 기능 추가한 신제품군 발표



9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아마존 신제품 발표 행사장에서 한 방문객이 전자책 리더기 '킨들 스크라이브 컬러소프트'를 체험하고 있다. 이 제품은 '킨들 스크라이브'에 컬러 필기와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추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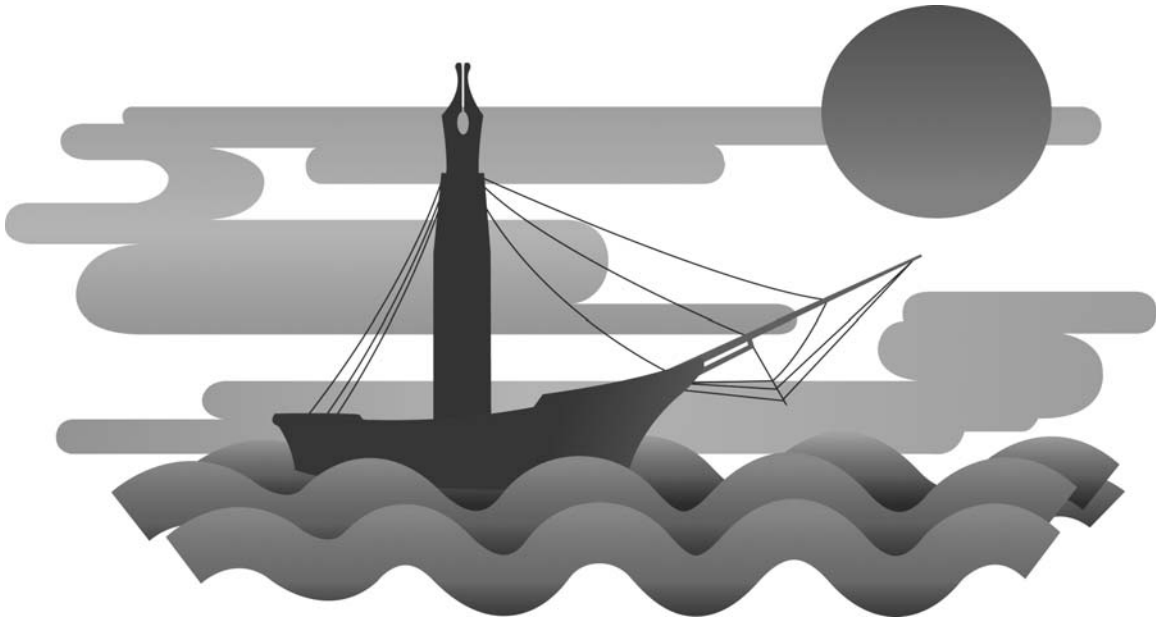
中 국경절 맞아 국기 배경으로 셀카 찍는 사람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국경절) 78주년인 1일(현지 시간) 홍콩에서 주민들이 중국 국기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